

특별기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상생'이 최우선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



삼월의 들녘에는 파스한 봄빛이 내려앉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미국과 중동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무거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지역 경제의 체력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고비용 시대에 직면한 지역 산업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농업 현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편을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다가오고 있다.

통합의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지금, 우리는 그 화려한 그림자 뒤에 가려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지역 내 농촌 지역민들은 오랜 기간 행정구역 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온 측면이 있다.

도시의 행정 체계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농촌 지원 정책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인접한 시·군 지역에 비해 보조금과 정책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도시 배후에서 실제 농업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행정적 역차별'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행히 최근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도시형 농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여건을 조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또한 국회에서도 광역시에 속한 농촌 지역을 법적 '농촌'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정책적 배제를 해소하려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리문제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행정 중심이 아닌 '삶의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통합의 효율성에만 매몰된 나머지 특정 지역이나 산업이 또 다른 소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도시형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라 기존 전남의 낙후 지역, 그리고 전통적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역으로 차별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상공인과 농민들이 정책 논의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행정, 그리고 입법 영역의 종사자들이 더욱 세심하고 치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단순히 선을 긋는 행정적 통합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구조를 살리면서도 정책적 혜택은 균형 있게 돌아가는 정교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상생'에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과정에서 도시 배후 농촌이 도시화의 물결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거나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합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조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농촌의 팍팍함이 멈추면 도시의 식탁도 멈춘다는 평범한 진리는 통합의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행정통합이 또 다른 소외의 출발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월의 대지 위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 모든 시민에게 풍성한 결실을 돌아오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기고

소상공인의 땀과 노력, 지역경제 든든한 뿌리

장문영

광주 남구청 민생경제과 경제활력팀장



어릴 적 속 담배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저녁 시간 유일한 즐거움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 것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과자 값을 주시면 나와 동생은 한결같이 동네 조그마한 슈퍼 '이빠네 집'으로 달려갔다.

과자를 먹으며 아빠, 엄마랑 봤던 '전설의 고향'은 지금도 오싹함과 서늘한 느낌으로 기억된다.

'이빠네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도란도란 둘러앉아 있던 따뜻한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동네의 조그마한 가게들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에서 나아가 한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골목의 작은 가게 불빛 하나가 꺼지면 그 자리는 단순한 한 점포의 빈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운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새벽부터 문을 여는 김밥집, 작은 구멍가게, 손님을 기다리는 1인 미용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은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자 우리 이웃의 삶을 이어주는 따뜻한 힘이다.

이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해 우리 남구는 여름의 뜨거운 평별과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전 직원 이나서 골목형상평가 지정과 남구 동행카드 가맹점 확보를 위해 골목골목을 샅샅이 누볐다.

그 결과 남구 전 지역에 7246개의 점포를 가진 골목형 상점가 85개를 조성했고, 동행카드 가맹점은 4263개를 확보해 올해 설을 맞아 발행한 40억원의 동행카드가 5일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소비위축, 중동 전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금 부담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사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높은 금리와 부족한 담보 때문에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만난 상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바로 특례보증, 대출이자 차보전, 보증수수료 지원, 그리고 희망대출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먼저 특례보증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은행과 구청이 각각 1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24억원을 보증해 남구 내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도 필요한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차액 4%와 보증수수료 0.7%를 지원해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경영 안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또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지원도 함께

추진해 초기 금융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는 작은 비용 하나라도 덜어드리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카드 결제가 필수가 된 사회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영세 임차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곧바로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다.

새마을금고·신협과 협력해 추진하는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지역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마련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각각 11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구청은 4.5%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히,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소상공인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소상공인에게 지역이 함께하고 있다는 작은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다.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장님의 마음,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맞이하는 그 정성, 그리고 지역을 지켜온 수많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응원하고 도우려는 부족하지만 넉넉한 마음이다.

작은 가게의 불빛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지역과 행정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할 시기이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거창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취재수첩

'가품과의 전쟁'... 처벌 강화 시급하다

윤용성

산업부 기자



한국 패션 시장과 소비자는 늘어나는 위조 명품, 일명 '짜퐁' 때문에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짜퐁이 패션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문학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한다.

짜퐁 제품 제조·유통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제범죄다. 최근에는 지역 호텔 행사장을 대관해 가품을 진품으로 가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5)가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아웃도어·캐주얼·골프 의류 등 국내외 유명 15개 브랜드 제품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국내에서 최근 5년간(2021~2025년) 위조 상품 유통과 가짜 상품 부착 등 상표권 침해 범죄가 1만건 이상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01건(검거 건수 2158건·검거인원 2540명), 2022년 2216건(검거 건수 1966건·

검거인원 2345명), 2023년 2390건(검거 건수 2236건·검거인원 2492명), 2024년 2215건(검거 건수 2183건·검거인원 2375명), 지난해 2395건(검거 건수 2279건·검거인원 246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2300여건 이상의 관련 범죄가 감소세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숨방방이 처벌'이 먼저 개선돼야 짜퐁 시장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상표법에서는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지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노릇이다.

가짜 명품이 판을 치고 있어 촘촘한 감시망과 함께 더욱 엄격한 단속, 처벌 강화로 몸통을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하다.

국산, 중국산 가릴 것 없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짜상품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전남 아이 낳을 병원 없다...대책마련 절실

전남지역에 아이를 낳을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가 161명을 넘어설 정도다.

이 때문에 지역 산모들의 타 지역 원정출산은 비일비재하다. 분만 인프리가 거의 붕괴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도 부천갑)이 최근 공개한 '한국의 분만 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 재정립' 연구는 우리나라, 특히 전남지역 임산부들의 의료소의 현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62개 시군구 중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전체의 33.3%인 84곳이나 되고 출생아의 10.1%인 2만4176명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임신부 10명 중 1명이 원정출산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남지역의 분만 의료시스템은 열악 그 자체다.

도내에서 8225명이 출생했는데 분만 인력은 전문의 49명과 조산사 2명 등 51명이었다. 출생아 1000명당 분만인력이 6.2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국 평균이 10.4명이었고 가장 높은 서울이 14.9명, 광주는 12.3명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도내 분만 인력 1명이 감당할 출생아 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61.3명이나 됐다.

문제는 현행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의 분만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데 있다.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 인력 2471명중 2423명으로 전체의 98.1%를 차지했고 다른 분만 인력인 조산사는 1.9%인 48명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이들의 활약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추세와 높은 근무강도와 분만·출산과정의 의료사고 리스크 등으로 의과대생의 산부인과 전공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같은 의료 취약지역에 분만 의료인력이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임신·분만·산후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를 담당하는 조산사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등의 개편도 시급하다.

진도 해상풍력으로 '바람연금' 시대 연다

진도군에 세계 최대 규모급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진도 해역 일원의 총시설 용량 3.6GW급 해상풍력 1·2단계 사업을 모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때 따른 것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달리,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과의 수용성을 확보해 공동점속설비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 주도 발전보다 신속한데다 어업 갈등이나 송전선 문제 등도 최소화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진도군의 해상풍력사업은 1단계(1470MW), 2단계(2130MW) 등 총 시설 용량이 3.6GW에 달하는 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3~4기와 맞먹는 발전량이다.

단일 단지로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3.7GW)와 비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적정성 평가와 사업자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내년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향후 2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는 물론, 전남 해상풍력의 또 다른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 이로 인한 연쇄적인 경제 파급효과와 대규모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이 준공되는 2031년(1단계)과 2033년(2단계)부터 군민들에게 이른바 '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년 간 발생할 직접 수익금, 배당금, 지원금만 해도 총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진도군에는 수익금 3100억원과 지원금 900억원 등 총 4000억원이 들어오고 군민에게는 직접 배당금으로 총 1조4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사업 신청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선정에는 전남도, 진도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공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유관기관과 전방위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력해 다른 지역이 십수 년 간 매달렸던 노력을 단숨에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진도가 해상풍력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